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문제는 부족한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서비스 이용자의 보육료 또는 교육비 부담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육아재정의 확충에 의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재정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 문제이다. 이 오래된 문제는 정부의 효율적 육아지원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된 육아지원시설의 이원화는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간에 소모적 갈등을 지속시켜 왔다.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진단한 OECD 보고서에도 소관 부처의 이원화와 정책결정자 및 실무진의 협력 부재와 두 영역의 연계 미흡 등이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대다수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두 영역의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이 누구에게 유리한 통합인지 또는 불리한 통합인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근 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들 대다수가 두 영역의 통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양쪽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문가가 적지 않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반목이 비효율적이지만 현 상태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다.

어차피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서비스 기능이 다르게 설립된 것이므로 굳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입장에 선 전문가도 있다. 2004년 말 정부가 실시한 전국 보육시설과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장의 서비스 기능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이용 아동, 종사자, 물리적 환경, 재정 등에서 일부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차이 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았다.

현재 겪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보다는 두 영역의 통합 과정에서 겪게 될 진통이 더 염려스럽기 때문에 통합에 회의적인 사람도 많다. 지금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출산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가 결단하여 해낼 일인지, 전문가나 육아서비스 현장 관계자가 나설 일은 아니라 는 생각을 표한 전문가도 있다. 말하자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필요할지 모르나, 먼 장래의 희망이고, 통합이 안될 가능성이 많으며, 정부가 추진하되, 나의 입장을 불리하지 않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등거리에서 지원하는 대다수 학자나 관계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제도의 개선을 우리나라 육아 지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수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현행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구성과 기능이 거의 같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중앙부처간 협력을 위하여 두 위원회가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물론, 적어도 각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조정을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 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협력과 조정에 실제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운영되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협력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소관부처의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연령별 이원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 그밖에 가능적으로 교육과정의 결정과 교사양성과정은 교육 담당부서에서, 육아지원시설의 운영 관리와 감독 부분은 보육 담당부서에서 맡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은 모두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부처간 조정기구를 통해 초기에는 두 영역의 협력 방안을 찾아 적용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식을 예고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차이가 거의 무색한 현실에서 육아지원시설의 제도적 이원화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는 우리나라 육아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면서 불합리한 교사양성제도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과 부모 등 이용자의 비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의 주요 육아선진국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제도를 통해, 또는 최소한 연령별 이원화 제도를 통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일본 역시 유보통합이 지자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까지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먼 장래에나 가능한 것으로 미루지 말고,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들 자신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과제를 찾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육아지원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섰으면 한다.